

컴퓨터시스템의 “2000년 문제”

대응접근 방향과 유의사항

2000년까지 남은 3년이라는 기간이 긴 것 같지만, 이문제의 대응에는 결코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없다. 그 영향범위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OS를 비롯한 PP나 벤더가 제공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등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쯤되고 보면 방대한 소프트웨어 자산 전부를 빠짐없이 충분히 손질할 시간은 이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상황으로 보아 ‘2000년 문제’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효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전체계획의 설정’이다. 이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 4가지 점이다.

- a. 현재상황의 정리와 영향범위의 규명
- b. 코어가 되는 서브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샘플조사 실시와 필요한 변경량의 정량적 파악
- c. 샘플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컴퍼넌트마다 최적 수정방식 결정
- d.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나 대외적 영향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검토우선 순위의 설정과 실시체제의 구축 또한 계획설정 후 구체적인 수정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 a. 불요불급한 신규개발 안건의 동결
병행개발은 확인작업의 2중화나 테스트환경의 복수소유를 불가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결 또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 b. 거래선과의 대응에 관한 조정
대응할 시간이 없음이 명확해졌을 경우에는 즉시 업무상 조정을 행한다.
 - c. 충분한 예산확보와 메이커·벤더와의 협력관계 구축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과 아울러 타사와의 경합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메이커·벤더와 대응멤버에 대한 협력체제를 이룩한다.

‘2000년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에는 방대한 공수와 착실하고도 철저한 작업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이들 작업은 새로운 차별화를 실현하는 신기능 등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다. 다만,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일 뿐이다.

이 문제는 결코 정보시스템 부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누구의 책임’ 등 따지고 있을 시간도 이미 없다. 경영층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현황조사부터 착수하는 전사대응 프로젝트의 발족’ 등 필요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1990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단계별로 시뮬레이트해 본다.

<제1단계> 조짐 (1990년경)

이 문제를 화제로 떠올려도 “그런건 다 알고 있다”고 오히려 의아스럽게 생각할 정도 였다. 일부메이커에서 문제대처를 제안했으나 유저쪽에서는 진지한 대응이 없었다.

〈제2단계〉 파탄의 첫 걸음 (95년 상반기)

시스템의 한계가 임박하여, 보수담당 SE가운데는 대응필요성을 호소하는 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메이커로부터 구체적 제안도 제기되었으나, 조직적인 체제를 정비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 “우리는 완전 오픈체계로 이행할 것이므로 걱정없다”는 낙관적인 발언이 자주 들려왔다.

〈제3단계〉 문제의 표면화 (95년~96년)

예상되었던 사태가 서서히 발생한다.

- a. 보존기한이 서력2000년으로 되어있는 데이터가 소거된다.
- b. 날짜순으로 프린트되어야 할 장부·전표의 첫머리에 서력2000년 데이터가 나온다.
- c. 단말에서 서력 2000년 이후의 데이터를 입력해도 거절된다.

〈제4단계〉 사람과 예산확보의 지연 (96년~97년)

문제의 표면화에 따라, 황급히 요원을 확보하려해도 이미 바닥이 나 있다. 또한 적절한 파이릿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근거가 박약하여 예산확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제5단계〉 뒤 늦은 착수 (97년~98년)

영성환 체제와 개발환경으로 간신히 스타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a. 서력2000년 대응이 끝난 새로운 테스트환경에 맞출수 없어 테스트할 수 없다.
- b. 예산이 없이, 서력 2000년 대응지원 툴을 도입할 수 없다.
- c. 영향조사방식·수정방식의 선택을 잘못했기때문에 필요이상의 공수가 소요된다.
- d. 새로이 파견된 기술자의 레벨이 너무낮아 써먹을 수 없다.

〈제6단계〉 대응불능의 명확화 (99년경)

기간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연이어 발생하는 장애의 대응처리에 쫓겨, 본격적 대응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땀질에 시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제7단계〉 시스템 다운과 업무정체 (2000년경)

미대응시스템의 운용 중지·연기. 단, 그 판단조차도 잘못되는 예도 나온다.

- a. 오픈계의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b. 하드웨어계에 대한 영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c. 베이스계의 소프트웨어를 바꾼뒤에 테스트를 생략했다.

〈제8단계〉 그 뒤 (2000년이후)

응급조치로 고비를 넘긴 시스템의 본격적 대응은 계속되고 있으나, 연착륙에 실패하여 수많은 고객을 잃은 기업에서는 경영진의 문책이 뒤따른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2000년 문제’에서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나, 어쨌든 경영의 긴급과제로 인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자료 : 일본 노무라 연구소〉